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6일 오전 11시 홍천 비콘 힐스골프클럽에서 '2016 사랑나눔 회원 친선골

프대회'를 개최.

“강원랜드 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 차단”

도내 건설업체가 강원랜드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제한 발주가 가능한 공사인데도 전국 발주로 풀린 데다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도내 기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추정금액 36억여원 규모의 '마운틴 식음시설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고 28일 개찰을 예고했다.

이 공사에 대해 건설업계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해 공사금액 82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공고가 가능한 데도 이를 배제했

일부업체 “단순 환경개선 공사인데 과도한 준공실적 요구”

강원랜드 “안전 최우선... 병행공사는 도내 업체 이미 낙찰”

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한경쟁입찰 운용기준에도 없는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도내 기업 중 이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아예 없고 전국에서도 극소수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최근 10년 이내 스키장건축물 또는 5성급 호텔 이상 숙박시설 건축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영업시설 환경개선 공사인데 공사 이

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며 도내 업체는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건 역시 배제하는 등 도내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이번 공사 건축물은 대형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영업장소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데다 고산 자대에 위치해 기후적 조건이 열악

하기 때문에 실적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은 중복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제한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국내 스키장은 대부분 강원도에 위치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실적제한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공사실적이 있는 도내 기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공사와 병행하는 공종은 지역 제한으로 발주해 강원도 업체가 이미 낙찰받아 착공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6일

오전 11시 흥천 비
콘힐스골프클럽에
서 열리는 '사랑나
눔 친선 골프대회'
를 주관한다.

강원랜드 공사 입찰공고 논란

과도한 실적제한 전국 입찰 발주
도건설협 "사실상 지역업체 외면"
강원랜드 "전기 등 지역제한 입찰"

강원랜드가 35억규모의 공사를 발주하
면서 전국 입찰로 진행, 지역 업체를 외
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강원랜드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

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마운틴 식음시설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공
사비는 35억 7200만원이다. 입찰은 제한
경쟁과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해당 공사
에 과도한 실적제한을 두고 전국입찰로
발주해 사실상 지역 업체를 외면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강원랜드는 공사를 발
주하면서 입찰자격조건에 '10년 이내 스

키장과 5성급 이상 호텔 준공실적을 보
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도 건설협회는
해당 자격조건을 가진 도내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 사실상 해당 공사 입찰 기회
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측은 "해당공사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하
는 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경험 많은 업체
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입찰로 공고했다"
며 "하지만 해당공사와 병행되는 전기·
통신공사 등은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된
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식사에 커피까지 대접 받으면 위법일까?

김영란법 Q&A 몰랐다가 범법자 될 수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규정 문답풀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나 위법이나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이다.

[적용 대상]

Q.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등도 적용되나.

A.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 3만 9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Q.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A.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 청탁]

Q.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A.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A. 건설사 직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Q.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다면.

A.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녀의 경우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A.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토지 소유자가 요건상 어려운 걸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했다면.

A.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토지 소유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공무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신고]

Q. 건설사 직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A. 김영란법에 따르면 두 번째 부정청탁부터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하기는 했으나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금품 수수]

Q. 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 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Q.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A. 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Q. 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턴키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A. 공무원수행증 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줬지만 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A. 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Q. 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받았다면.

A. 친족이나 장기간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 선물을 받았다면.

A.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